

재일동포 민족학교

분단과 탈식민의 역사

정진성

1. 서론

1) 문제 제기

수많은 재일동포¹가 일본에 정착한 지 수세대가 지나도록 한국어를 잊지 않고, “한국인” 또는 “조선인”으로서의 민족정체성을 지키며 살아오고 있다. 수세대에 걸쳐 귀화하지 않고 민족정체성을 지키고 있는 소수민족집단은 전 세계적으로 거의 없다. 재일동포들의 이러한 상황은 민족학교의 존속

정진성(鄭鎭星)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및 동대학원을 수료하고 시카고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96년부터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서울대학교 여성연구소장, 사회발전연구소장, 인권센터장 및 한국여성학회장, 한국사회학회장을 역임했다. 일본 도쿄대학, 교토대학과 규슈대학의 초빙 교수, 유엔인권소위원회 위원 및 특별보고관, 유엔인권이사회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홍조근정훈장(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 삼성행복대상 여성선도상, 서울대학교 사회봉사상을 수상했다. 저서로 『현대일본의 사회운동론』(나남, 2001), 『일본군성노예제』(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04), 『인권으로 읽는 동아시아』(공저, 서울대출판문화원, 2010), 『인권사회학』(공저, 다산, 2013) 등이 있다.

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해방 후 일본 정부의 억압에 대항한 치열한 투쟁의 결과로 재일동포들의 집주지역에 설립되어 민족교육을 시작한 민족학교가, 갖가지 사회변화를 겪으면서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는 것이다. 이 민족학교의 존재 또한 전 세계적으로 유사한 예를 찾기 힘들다. 민족학교의 존재는 재일동포의 특수성을 이루는 근간이라고도 할 수 있다.

민족학교는 남북 분단의 상황을 반영하여 한국학교(민단 및 한국과 관련)와 조선학교(총련 경영)로 분리되어 있으며, 한일관계, 북일관계 및 남북관계에 영향을 받으며 변화해왔다. 민족학교의 형성 과정에서 일본학교 내에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가르치는 민족학급이 탄생하여 변화해왔다. 최근에는 국제학교 등 새로운 형태의 학교가 등장했고, 주말한글학교 등의 사회교육도 여러 형태를 띠며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민족교육은 일본의 사회운동과 정책 변화, 그리고 전 세계 민족 및 인권 교육의 경향에도 영향을 받으면서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일본학교로 진학하는 재일동포가 증가하는 가운데, 한국학교와 그와 관련된 민족교육은 귀화로 인한 특별영주자²의 감소와 다른 한편 뉴커머의 증가, 그리고 일본인의 한국에 대한 관심 증가 등 다변화된 조건 속에서 좀 더 현실적인 대응을 모색 중이다. 일본학교 내에 민족학급이 다양화하고 사회교육도 활발해져서 동포뿐만 아니라 일본인까지도 활용하고 있다. 일본 소학교, 중학교에서 국제수업 또는 인권교육의 일환으로 재일동포를 초청해 한국문화를 소개하는 수업을 하고 있다.

1 '재일동포'는 재일한국인, 재일조선인, 재일한국·조선인, 재일코리안, 재일한인 등 여러 명칭으로 지칭되고 있다. 남북한으로 분단되어 있는 역사적 상황에서 그 각각의 명칭은 나름의 맥락과 이유를 가진다. 남북한계로 분리된 상황에서 '재일한국인', '재일한인', '재일조선인'이라는 명칭에 대해서는 각각 반대가 많다. 이러한 고민에서 만들어진 '재일한국·조선인'에 대해서는 남북한의 분단을 인정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에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정서가 존재한다. '재일코리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를 영어로 표기한다는 거부감이 있다. '재일동포'는 다소 민족주의적 감정이 포함되어 있는 듯하며 나라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 문제점이 있지만, 한국 사회과학에서 무난히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 글에서는 재일동포를 사용할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 '재일한국인'과 '재일조선인'도 사용할 것이다. 재일동포 명칭에 대해서는 정진성, 「'재일동포' 호칭의 역사성과 현재성」, 『일본비평』 7호,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2012를 참조할 것.

2 일제강점기에 일본으로 이주하여 현재까지 일본에 거주하는 사람과 그 자손들을 일컫는다.

다른 한편, 해방 후 지금까지도 민족학교의 대부분을 점하고 있는 조선학교는 학교와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고, 이전까지 북한 지향이던 교육내용이 일본정주 지향의 재일동포 현실에 기초해 실용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한국적 동포를 경계 없이 받아들이고 있다. 조선대학교를 포함한 대부분의 조선학교에 한국 국적을 가진 학생의 비율이 절반을 넘어 점점 증가하고 있다. 대부분이 재일동포 3,4세인 교장과 교사들은 한국적 및 ‘더블’(한국적/조선적과 일본적 부모 사이에 태어난 대부분이 일본 국적 동포)뿐만 아니라 가까운 가족 중 한국/조선인이 한 사람이라도 있는 일본 국적 학생들을 개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³ 조선학교에서 많은 한국적 학생이 북한에 대해 배우고 북한으로 수학여행을 다녀오고 조선적 학생들과 어울리며 같은 커뮤니티에서 생활하며 서로 국적의 벽을 느끼지 않는다.

남북한 경계의 완화라고도 볼 수 있는 민족학교에서의 이러한 양상은 아직도 강고한 남북분단과 민단-총련의 분단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특별영주자의 10%에 불과한 조선적 동포의 숫자⁴가 향후 더 적어진다면, 조선학교는 어떤 모습이 될까. 경영주체와 교사 및 학생의 관계가 다층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이 새로운 형태의 ‘민족학교’는 재일동포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민단-총련의 관계, 그리고 남북한 관계에는 어떠한 함의를 지니는 것일까. 이 질문들은 사실 재일동포의 존재와 연결되어 있고, 결국 탈식민과 남북한의 분단 상황으로까지 귀결된다. 필자는 이러한 질문들을 가지고, 민족학교의 형성과 변화 과정을 재일동포 내의 남북한계 집단간의 갈등과 대립, 또는 융합의 틀에서 정리해보고자 한다.

3 조선학교는 아직 조선인의 혈통이 섞이지 않은 일본인을 학생으로 받지 않고 있다.

4 그동안 재일동포의 숫자를 한국·조선적으로 통합, 통계를 내왔던 일본 정부가 2015년 12월부터 조선적과 한국적을 분리하여 통계를 산출하기 시작했다. 2015년 12월 재류외국인(중장기 재류자 및 특별영주자) 통계에 따르면 한국이 45만 7,772명, 조선이 3만 3,939명이며, 그중 특별영주자 수는 한국이 31만 1,463명, 조선이 3만 3,281명이었다(일본 법무성, 「재류외국인통계」 http://www.moj.go.jp/housei/toukei/toukei_ichiran_touroku.html).

2) 선행연구 및 연구방법

재일동포에 관한 연구는 주로 재일동포 학자들이 진행해왔으며 여기에 일본학자들의 연구가 더해진 정도였다. 한국에서는 뒤늦게 일제강점기의 동포사회 형성과 해방 직후 사회운동에 관한 역사학적 연구가 축적되기 시작했고, 재일동포의 법적 지위와 권리투쟁에 관한 연구가 법학, 인류학, 사회학 분야에서 이어졌다.

민족학교는 재일동포 연구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다루어왔다. 오자와 유사쿠(小沢有作)가 해방 후부터 현재까지의 민족학교에 관한 역사적 연구를 수행했으며, 박경식 등이 해방 후 재일조선인운동사 연구의 중요한 부분으로 민족학교의 투쟁을 다루었다. 재일동포 관련 연구가 크게 늘어난 1990년대 후반부터 민족학교에 관한 연구도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 일본인, 한국인 연구자뿐 아니라 해외 연구자들도 전 세계적으로 매우 독특한 성격을 지닌 재일동포의 민족학교에 관한 현지조사를 수행했다. 1997년 영어로 출판된 쏘니아 랑(Sonia Ryang)의 조선학교 연구는 필자 자신이 재일조선인으로서 민족학교에서의 경험을 살려 수행한 입체적인 연구로서 이후 민족학교 연구에 자극제가 되었다.⁵ 2000년대 들어서는 민족학교 연구가 크게 늘어났으며,⁶ 다큐멘터리 등의 형식으로도 연구가 확대되었다. 이렇게 연구가 활발했던 것은 남북관계가 유화 국면에 있어서 조선학교 연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2010년대에 들어 남북관계가 경직되면서 민족학교는 연구보다도 일종의 사회운동의 형태로 우리 사회에 소개되고 있는 상황이다.⁷

5 S. Ryang, *North Koreans in Japan: Language, Ideology, and Identity*, Westview Press, 1997.

6 朴三石, 『日本のなかの朝鮮学校: 21世紀にはばたく』, 朝鮮青年社, 1997; 이문웅, 「총련계 재일조선인의 생활세계: 인류학적 접근」, 『한국사회과학』 제26권 제1·2호,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04; 정병호, 「문화적 저항과 교육적 대안: 재일조선학교의 민족정체성 재생산」, 『비교문화연구』 제9집 2호,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2003; 宋基燦, 『語られないものとしての朝鮮学校: 在日民族教育とアイデンティティポリティクス』, 岩波書店, 2012.

7 예를 들면,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134개 단체로 구성된 '우리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은 2016년 4월 22일 중학동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북일관계 등을 이유로 여러 외국인학교 중 조선학교만을 고교무상화에서 배제한 차별을 중지하라고 일본 정부에 요구했다(연합뉴스, 2016. 4. 22).

이 글은 문헌 및 영상 자료조사, 심층면접 및 현지조사의 방법에 기초해 작성했다. 첫째, 해방 후 1990년까지 민족학교의 역사적 전개 과정은 주로 문헌연구를 통해 고찰했다. 우선 민족학교에 관한 연구서로서 서울대학교 기증자료실의 ‘오자와 유사쿠 문고’(小沢有作文庫)의 문헌들이 기초가 되었다. 또한 여러 민족학교에서 발행한 일차자료와 홈페이지를 주 연구 자료로 참고했다.⁸ 재일본조선인인권협회가 만든 『민족교육권리를 위한 사전』과 민단·총련계 관련 민단신문, 조선신보도 중요하게 참조했다.⁹ 한국과 일본의 시민단체들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민족학교에 관해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¹⁰ 한국과 일본에서 만든 영화와 다큐멘터리도 재일동포사회와 민족학교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¹¹

둘째, 심층면접은 한국으로 ‘모국 수학’을 온 동포 학생들과 일본 현지에서 만난 동포, 활동가, 교사 및 교장, 민단과 영사관 관계자들에 대해 수행했다. 모국 수학 학생들에 대해서는 수차례 깊이 있는 면담을 할 수 있었고, 연구 과정에서 친분이 쌓인 재일동포들과도 상당히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방문이 힘든 경우 전화로 짧게 인터뷰한 경우도 있으며, 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을 집단 인터뷰하기도 했다. 2010년대 들어 총련계 사람들과 교류가 어렵게 된 정치 상황에서 조선학교 학부형을 통한 간접 인터뷰를 한 경우도 있다. 이 많은 경우를 여기에 일일이 나열하기도 힘든 정도다.

셋째, 민족학교 직접 방문조사와 몇 차례에 걸쳐 수행했다. 필자가 안식년을 이용하여 일본을 장기 방문한 1989~1990년, 2003년, 2007년, 그리고 2016년에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으며, 중간에 틈틈이 방문하여 조사를 수행했다. 수업 참관, 교장 및 교사 면담, 학교시설 견학, 행사 참가 등을 수행했

8 각 조선학교의 홈페이지와 총련 관련 기관들(예컨대 女性同盟, 朝鮮新報, 清商會 등)의 접속은 한국에서 대부분 가능하지만, 총련의 홈페이지는 차단되어 있다. 총련과 관련된 민족학교의 내용은 일본 현지조사에서 보완했다. ‘재일본조선인교직원동맹’(在日本朝鮮人教職員同盟) 홈페이지도 접속이 가능했으나, 2007년 7월부터는 차단되었다.

9 재일본조선인인권협회(<http://k-jinken.net>), 조선신보(<http://chosonsinbo.com>).

10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http://www.mongdang.org>), 朝鮮學校を支援する全国ネットワーク(<https://www.facebook.com/chosungakuen/?fref=nf>) 등.

11 〈우리학교〉, 〈60만명의 트라이〉, 이문웅 교수의 〈교토중고급학교 탐방〉 등 수많은 영상자료가 있다.

다. 2016년에는 조선학교 참관이 힘들게 되어 학교의 홈페이지를 참조하고 학부형과 일본 교수들을 통해 간접조사를 수행하는 한편, 한국학교와 민족학급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3) 재일동포 민족교육의 시기 구분

재일동포 민족교육의 시기 구분은 민족교육을 조망하는 데 매우 중요한 틀을 제공한다. 오자와 유사쿠는 일본 정부의 정책, 재일동포의 대응, 그리고 일본인(교사 포함)의 태도라는 세 가지 지표를 가지고 시기 구분을 했다. 제1기는 1920년부터 1945년 8월 광복까지 일본 정부가 민족교육을 철저히 억압하고 천황숭배 의식을 주입시킨 시기로, 제2기는 광복부터 1970년까지의 25년간으로 일본 정부가 민족교육을 탄압하고 재일동포가 민족교육을 지키기 위해 저항한 시기라고 보았으며, 제3기는 1970년부터 오늘에 이르는 시기로 일본 정부의 변함 없는 동화교육 기조 속에서 일본인 교사 및 지방자치체에서 민족교육을 인정하는 움직임과 함께 재일동포 내의 탈민족 경향도 진행되는 시기라고 분석했다.¹² 오자와의 시기 구분은 일제강점기에 이루어진 민족교육을 중요하게 평가한 점이 특기할 만하며, 일본 정부와 재일동포 및 일본 시민사회의 움직임 속에서 민족학교의 설립과 분화 과정을 조망하는 틀을 제공한다. 하지만 일본 내의 변수만을 고려하고, 한국과 북한, 민단과 총련이라는 주요 변수가 빠진 것과, 조선학교에 비해 소수지만 최근 들어 중요해지고 있는 한국학교의 존재를 과소평가한 한계가 있다. 또한 1990년대 이후 두드러지기 시작한 한국/조선학교 내의 변화를 포착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일본고교무상화에 조선학교가 제외된 것에 항의하는 한 그룹은 해방 후 조선학교에 대한 일본 정부의 정책에 초점을 두고 재일동포민족교육의 시기를 구분했다. 제1기는 1945~1949년: 조선학교의 시작~혼란과 탄압을 넘어서, 제2기는 1950~1954년: “공립”조선학교 시대, 제3기는 1955~

12 오자와 유사쿠, 이충호 옮김, 『재일조선인 교육의 역사』, 해안, 1999, 22~24쪽.

2001년 재출발과 발전, 그리고 제4기는 2002년부터 현재까지: 납치문제와 무상화 제외의 시기로 구분했다.¹³ 이 시기 구분은 조선학교의 변화 과정, 특히 법적 지위에 대한 전체 흐름을 잘 보여주지만, 조선학교에 치우치며, 일본 정부의 정책만을 주요변수로 보아, 한국 정부의 역할과 남북관계, 민단/총련 관계, 한일관계의 영향을 보지 않고 있다.

해방 후 민족학교의 ‘존재’는 일제강점기의 유산이면서 다른 한편 남북 분단의 표상물이기도 하다. 일제시기와 해방 직후의 민족학교 설립 투쟁은 재일동포 전체가 하나가 되어 전개했는데, 1948년 이후 조선학교/한국학교의 분립으로 이어졌다. 1955년 총련의 설립과 북한의 원조에 힘입어 조선학교는 압도적 우세를 점하면서 소수의 한국학교와 단절되었다. 1990년대~2000년대 초 잠시의 교류기간을 제외하고 지금까지 거의 전 시기에 한국/조선학교의 단절은 계속되었다. 그러나 재일동포의 일본 정주 지향이 확고해지면서 한국/조선학교 모두 학생 수가 감소되면서 실용화·다양화로의 개선을 가속화하는 한편, 통일을 대비한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한편 조선적에서 한국적으로의 대대적인 이동과 함께 조선학교의 한국적 학생 비율이 대폭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재일동포 민족학교의 형성과 변화 과정을 이 글에서는 (1) 민족 공동의 민족교육투쟁의 시기(일제강점기~1947년), (2) 민족학교의 분열과 민족학급 설립/조선학교의 압도적 우세(1948~1980년대), (3) 민족교육의 실용화, 다양화 및 통일지향(1990년대 이후)으로 나누어 고찰하고자 한다. 이러한 시기 구분에 따라 재일동포 내의 대립과 융합 및 향후 남북관계에 대한 함의도 끌어내고자 한다.

13 <http://mori.sakura.ne.jp/kokuseki/siryou/140126/rezyume0126.pdf>

2. 민족 전체의 교육투쟁(일제강점기~1947년)

1) 일제강점기 민족학교의 열망

1917년경 일본에 조선인의 입국이 급증했고, 1923년경부터는 무시할 수 없는 규모로 성장했다. 학령아동의 수도 증가했는데, 다나카 가쓰미(田中勝文)의 추정에 따르면 1924년에 4,000명이던 것이 1940년에는 20만 2,000명으로 늘었다.¹⁴

1930년 문부성 보통학무국은 일본 거주 조선인에 대해 학령아동을 취학시킬 의무를 지시했으나,¹⁵ 생활의 궁핍 때문에 아동도 일한 경우가 많았다. 또한 당시 일본학교 내에서 재일조선인에 대한 차별이 심해, 실제 재일조선인 아동의 취학률은 매우 낮았다. 1931년에 18.5%, 1933년에 39.8%로 당시 일본아동 취학률 99%에 비하면 절반 수준도 안 되었고, 그나마 야간 소학교에 다니는 경우가 많았다. 소학교 교육은 대체로 일본 아동과 같은 교실에서 배웠지만, 간혹 조선인 아동만 따로 교육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분리교육에 대해 일본사회에서 “조선인의 나쁜 습관을 못 고치게 한다”는 비판이 등장했고, 전체적으로는 통합교육이 대세였다. 1937년 국민총동원 시기부터 일본 정부는 ‘협화(協和)교육’을 통해 황민화 정책을 강화해나갔다. 이 과정에서 재일조선인 아동의 취학률은 크게 증가했다.¹⁶

2) 해방 후 민족학교의 설립

해방 후 조선인의 귀국이 일대 혼란을 빚다가 1946년 말에 일단락되었을 때, 약 65만 명이 남았다.¹⁷ 그들은 귀국선을 기다리다 여비를 다 써버려 다시 일을 하게 된 사람, 귀국 시 가지고 갈 수 있는 재산이 제한되어(1,000엔)

14 田中勝文, 「戦前における在日朝鮮人子弟の教育」, 『愛知県立女子紀要』, 1967(오자와 유사쿠, 『재일조선인 교육의 역사』, 95쪽에서 재인용).

15 오자와 유사쿠, 『재일조선인 교육의 역사』, 96쪽.

16 김대성, 「재일한국인의 민족교육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교육사회학 박사논문, 1996, 99~122쪽.

17 민단 홈페이지에 게재된 재일동포 총수는 1944년 193만 6,843명, 1945년 111만 5,594명, 1946년 64만 7,006명이었다(<http://www.mindan.org>).

기다리게 된 사람, 그리고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어 남은 사람들이었다.¹⁸ 귀국이 어렵게 되면서 일본 각지에 국어강습소의 형태로 민족교육이 시작되었으며, 그것이 본격적인 학교 건설로 이어진 것이다.

일본 정부와 연합군 최고사령부(이하 GHQ)는 재일조선인의 법적 지위에 대하여 명확한 방침을 내리지 못하고 혼란한 상태였다.¹⁹ 재일한인의 애매한 법적 지위는 교육 면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1946년 11월 재일조선인은 일본의 법령에 따른다는 점령군의 지령을 받았고, 1947년 4월 문부성은 조선 아동도 일본교육에 참여시킬 의무가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조선인이 그 자녀를 교육시키기 위해 소학교 또는 상급학교, 혹은 각종학교를 신설할 경우, 부현(府縣)은 이를 허가해도 상관없다”고 명시했다 [학교교육국장통달 잡학(雜學)123호].²⁰

좀 더 체계적인 민족학교 건립은 1945년 10월에 전 조선인을 대표하는 조직으로 탄생한 재일본조선인연맹(조련)²¹을 중심으로 본격화되었다. 재일동포들은 힘을 모아 도쿄, 오사카 등 전국 각지에 학교를 세우기 시작했다.²² 정규 중학교와 고등학교, 정치학원 등도 세웠다. 조련이 명시한 교육의 목표에는 민족적 정체성(민주주의적 애국자를 양성한다)과 재일의식(일본 경제의 기초 위에서 동포생활 문제에 관한 인식을 확고히 한다)이 함께 들어 있었다. 교육을 위한 독자적인 교재도 출판했다.²³

3) 민족학교 탄압과 교육투쟁

18 오자와 유사쿠, 『재일조선인 교육의 역사』, 185~186쪽.

19 법적 지위에 관해서는 정인섭, 『재일교포의 법적 지위』, 서울대학교출판부, 1996을 참조할 것.

20 오자와 유사쿠, 『재일조선인 교육의 역사』, 216~217쪽; 朴慶植, 『解放後在日朝鮮人運動史』, 三一書房, 1989, 184쪽.

21 조련 결성에 대해서는 정진성, 「조총련조직연구」, 『국제지역연구』 14권 4호,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2005를 참조할 것.

22 도쿄에는 1946년 3월 말, 초등학교 23개소(아동 수 1,700여 명), 1946년 4월 오사카에는 아동학원 68교(아동학원 8,800여 명), 고베(神戸)에는 45교(3,700여 명)가 세워졌다.

23 조련은 1945년 11월경에 『조선역사교재초안』(상·중·하 3권, 등사인쇄)을 출판하고, 1946년 2월 중앙기구 내에 초등교재편찬위원회를 결성하여 국어, 역사, 산수, 이과 등의 교과서와 참고서, 사전 등을 출판했다(朴慶植, 『解放後在日朝鮮人運動史』, 137~145쪽).

해방 직후 민족학교를 용인한 일본 정부는 1947년 말부터 탄압으로 급선회했다. 1947년 12월 각의 결정을 거쳐 1948년 1월에 문부성은 조선인의 자주교육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학교교육국장 통달 ‘조선인학교 설립의 취급에 대해서’). 이미 오사카에서는 GHQ가 조선인 학교를 관리하기 시작했고 교과서도 GHQ가 선정했다. 고베에서도 현(県) 교육부장이 조선인 아동을 일본학교에 입학시키라는 통달을 내렸다. 야마구치(山口)현에서도 조선인학교 폐쇄명령이 내려졌고, 효고(兵庫)현에서는 조선인학교에 학생을 받지 말라는 명령이 있었다.²⁴

조련은 1947년 신학기부터 그때까지의 학교를 통합·재정리하면서 6·3제 학교로 발족시키고, ‘교육규정’을 제정하며 민족교육에 박차를 가하던 참이었다.²⁵ 이 통달이 발표되자, 조련은 곧 문부대신과 오사카, 고베 및 도쿄의 교육국에 항의서를 제출했다. 도쿄조선중학교 등 도내의 각 학교는 학생대회를 열고 문부성과 도(都) 교육부장에게 보내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북한에서도 성명을 발표했고, 서울에서 학생단체는 일본의 민족교육에 대한 부당탄압에 항의 시위를 벌였다. 일본 전국 각지에서 반대운동이 일어났고, 특히 오사카와 고베에서 많은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했는데, 이것이 재일동포 민족교육사에 한 획을 그은 ‘한신교육투쟁’(阪神教育闘争)이다.²⁶ 박경식에 따르면 1948년 4월 민족교육탄압에서 3,076명이 검거되었고, 그중 기소자는 207명에 달했다.²⁷

1948년 5월에 재일동포 단체와 문부성은 각서를 교환하고 민족학교를 사립학교로 인정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꾸게 되었다.²⁸ 치열한 투쟁의 결과였던 이 타협을 바탕으로 당분간 민족학교는 1949년 10월 조련 해산과 함

24 朴慶植, 『解放後在日朝鮮人運動史』, 185~208쪽.

25 차영국, 「해방 직후 미귀환 재일한인의 민족교육운동」, 『한국근현대사연구』 제37집, 한국근대사학회, 2006, 14~16쪽.

26 김경해 외 공역, 『1948년 한신교육 투쟁: 재일조선인 민족교육의 원점』, 경인문화사, 2006.

27 한신(阪神)교육투쟁의 자세한 경과에 대해서는 朴慶植, 『解放後在日朝鮮人運動史』, 184~208쪽을 참고할 것.

28 문부성 당국과 조련은 1948년 5월 쌍방 교섭을 가지고, 문부대신과 조련 대표가 각서를 교환하게 되었다(朴慶植, 『解放後 在日朝鮮人運動史』, 200~202쪽).

께 민족학교 폐쇄 명령이 다시 내려진 시기까지 안정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3. 민족학교의 분열과 민족학급 설립/

조선학교의 압도적 우세(1948~1980년대)

한신교육투쟁을 비롯한 민족교육투쟁은 해방 후 고국에 돌아가지 못하고 일본에 남은 우리 동포 전체의 투쟁이었다. 그러나 이미 조련이 좌경화되고 있었으므로 민단이 조련과 대립해 새롭게 설립되었고, 이에 따라 민족학교는 조련계와 민단계로 분열되었다. 한국 정부가 민족학교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동안, 1955년 설립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를 통해 북한은 새롭게 조선학교를 설립하고 교육보조비와 장학금을 송금했다. 이렇게 부흥한 조선학교는 1970년대 본국으로 귀국할 의지가 약해지고 동포들의 일본 학교 진학이 늘어나면서 약화되기 시작했다. 일본의 국적법 개정과 귀화 요건의 간소화, 일본인과의 결혼이 증가하고, 전반적으로 출생률이 감소하면서 민족학교 입학생은 지속적으로 줄었다. 한편 한일관계의 호전에도 불구하고 한국학교는 조선학교에 비해 약세를 면치 못했다. 1949년 10월 일본 정부의 민족학교 폐쇄령에 따라 재일동포 학생들이 일본학교에 입학하는 상황에서 동포들의 노력으로 일본학교 내에 민족학급을 설치하여 민족교육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1) 조련의 좌경화와 민단 설립, 민족학교의 분열

처음 조련은 정치적 색채를 띠지 않고 전국적 대중조직으로서 귀환절차 돕기, 생활상담 등 재일조선인의 생활을 돕는 활동을 주로 했으나, 일본공산당 간부들의 대거 참가와 더불어 점차 공산주의적 성격을 띠기 시작했다. 더욱이 과격한 무력 행동을 벌이기도 하여, 우파 민족주의자들은 이탈하여 1945년 11월 조선건국촉진청년동맹[이하 건청(建靑)]을 발족했다. 다른 한편

조련과 건청의 대립을 목도하면서 무정부주의계 및 민족주의적 중립파들이 1946년 1월에 신(新)조선건설동맹[이하 건동(建同)]을 결성했다. 건청과 건동을 비롯한 군소 32개 단체들은 반공 우익진영의 결집체로서 1946년 10월 재일본조선거류민단(1948년 재일본대한민국거류민단으로, 1994년 재일본대한민국민단으로 개칭)을 결성했다.²⁹ 이러한 민족단체의 분열은 곧 민족학교의 분열로 이어졌다.

민단의 모체인 건청과 건동은 조련과 별도로 다소 늦게 민족학교를 건립했는데, 이미 민족학교를 선점한 조련을 넘어서지 못했다. 1948년 4월, 초등학교는 민단계 52개교(학생 수 6,297명)와 조련계 541개교(학생 수 56,210명)가 건립되어 있었다.³⁰

한편 1946년 4월 정치적으로 좌우에 관계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불편부당의 입장에서 교육을 실시할 것을 주장한 ‘백두동지회’ 회원들이 백두학원을 설립했다. 백두학원은 건국학교를 개설하고³¹ 민단계, 총련계의 모든 학교가 각종학교였을 때 1949년 5월에 재단법인으로 유일하게 문부성의 인가를 받아 제1조학교로 출발했다.

2) 일본학교 내 민족학급 설치

1949년 9월 일본 법무부는 ‘점령군에 대한 반항 반대 및 폭력주의적 범죄’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조련의 해산을 명령했다. 이어 10월과 11월 2차에 걸쳐 문부성은 조선학교와 한국학교를 포함한 민족학교의 폐쇄를 명령했다. 이때 폐교에 저항하여 남은 학교가 비합법 자주학교로서 1952년 전국에 44개가 존속했다. 한편 일본 문부성은 11월에 “일본인 학교에 수용하는 것이

29 정진성, 「민단-총련 관계의 변화: 남북한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탐색」, 『사회와 역사』 제82집, 2009, 291~292쪽.

30 차영국, 「해방 직후 미귀환 재일한인의 민족교육운동」, 16쪽; 강재언·김동훈, 하우봉·홍성덕 옮김, 『재일 한국·조선인: 역사와 전망』, 소화, 2000, 151쪽; 오자와 유사쿠, 『재일조선인 교육의 역사』, 195쪽.

31 건국공업학교·고등여학교를 개설하고, 1947년 4월 건국중학교로 통합·개칭함. 1948년 건국고등학교, 1949년에는 소학교를 개설했다.

불가능할 경우 … 공립분교를 당분간 인정한다”는 통달을 발표해 도쿄, 가나가와, 효고 등지에 공립 조선인학교(공립학교 14개, 공립분교 18개)가 설립되었다.

민족학교 설립투쟁의 결과로 일본학교 내에 민족학급을 설치한 것은 민족교육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앞서 언급한 1948년 5월의 문부성과 동포 간에 교환된 각서에 따라 전국의 조선인 집주지역의 공립학교에 정규수업시간 외에 조선인 학생들을 위한 특설학급(민족학급)이 설치되어 조선어, 조선사를 가르치게 되었다. 1952년 4월 오사카, 시가, 교토, 후쿠오카 등 전국 13개 부현에 77개의 특설학급이 있었다.³²

1955년 총련 설립으로 조선학교가 크게 확대되어 민족교육의 장이 마련됨에 따라 민족학급이 쇠퇴하기 시작했다. 일본학교에서 조선학생과 민족학급에 대한 극심한 차별³³도 민족학급 쇠퇴의 또 다른 요인이 되었다. 한일조약 체결 후에는 일본문부성은 일본인과 같은 교육을 행하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민족학급’의 폐쇄를 지시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족학급은 점차 줄어들어 1970년에는 그 수가 1/3로 축소되었다.

1971년 오사카시 니시나리(西成)구 나가하시(長橋) 소학교의 한 재일동포 학생이 학생회장으로 입후보해서 재일동포학생들의 권리를 주장한 것이 계기가 되고, 1972년 7·4공동성명서에 자극을 받은 재일동포들이 조국통일을 기대하고 특별활동 형식의 민족학급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1949년 오사카부가 법적으로 인정한 민족학급과는 다른 비공식적인 것이지만,³⁴ 새롭게 민족적 정체성에 눈을 뜬 3세 중심으로 확산되었다. 민족학급이 재일동포 학생들의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기록이 적지 않다.³⁵

32 청암대학교 재일코리아연구소, 『재일동포 민족교육 현황 조사』, 재일동포재단, 2013, 327쪽.

33 필자가 2016년 11월 도쿄의 한 라이브 카페에서 만난 동포 가수(60대 초반)는 소학교 시절 일본학교에 다니면서 교사로부터 당한 엄청난 차별을 노래로 만들어 불렀다. “아주 극소수의 선생님들을 빼고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조선학생들을 엄청나게 때리고 미워했다. 한국애들 모아놓고 너희들 중학교에 가지 마라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34 앞선 시기의 ‘각서 민족학급’과 구별하여 ‘72년형 민족학급’이라고 부른다.

35 예컨대 2016년 『世界』 3월호와 5월호에 상·하로 연재된 민족강사 박정혜 씨에 대한 나카무라 일성의 취재기.

3) 총련 설립과 북한의 교육 지원

1955년 민족학교가 정식 인가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직후인 1955년 5월에 총련이 발족되어 총련계 민족학교 설립의 새로운 전기를 이루었다. 총련은 총련중앙과 각현본부에 교육전담부서를 설치했으며 같은 해 10월에는 교과서 편찬위원회를 조직했고, 각급학교의 과정안, 학생규칙, 문건 양식도 새로 제정·실시했다. 총련 중앙위원회 제2차 회의(1955년 9월)에서 조선대학교 건설사업의 추진을 결정하고 1956년 4월 조선대학교를 창설하는 등 조선학교의 고등교육까지의 학교체계를 정비했다. 전국 각지에서 기부운동이 일어났고, 1957년 4월부터는 북한으로부터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지원받아 신축교사와 제반 시설을 확충했다. 이어서 북한의 지도하에 ‘각급학교 규정’을 제정하고, 학생 유치와 교원의 양성에 전력을 기울였다.³⁶

조선학교가 민족학교의 주류를 점하기는 했지만 1950~1960년대의 전성기를 지나 1970년대부터는 재일동포의 귀국 의지가 현저히 떨어지고 일본정주가 확실해지면서 이탈이 시작되어 1990년대에 들어서는 조선학교의 학생 수가 격감되었다. ‘재일’을 위한 교육을 확충하지 못한 것이다.

4) 한국학교의 정비

해방 후에 건립되었던 민단계 학교들이 대부분 해체되고, 금강학교(1946년), 교토국제학교(1947년), 도쿄한국학교(1954년) 등 일본 정부에서 새롭게 각종 학교 인가를 받은 한국학교가 설립되었다. 이 학교들은 1960년대 초부터는 한국 정부의 인가도 얻어(금강학교 1961년, 도쿄한국학교 1962년, 교토한국학교 1961년 중학교, 1965년 고등학교) 본국교육과 연계하기 시작했다.³⁷

36 총련은 자체 8대 강령 중 제4조에서 재일동포들의 민족교육에 대한 새로운 방침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우리는 재일 조선동포자녀들에게 모국어와 글로써 민주민족교육을 실시하며 일반성인들 속에 남아 있는 식민지노예사상과 봉건적 유습을 타파하고 문맹을 퇴치하며 민족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또한 총련결성대회보고에서도 민족교육을 강화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교육 방침을 제시하기도 했다(김홍규, 「재일동포들의 민족교육에 대하여」, 『이중언어학』 10, 이중언어학회, 1993, 171~172쪽).

37 김대성, 「GHQ점령하의 재일한국인 민족교육 활동에 관한 고찰」, 『평생교육학연구』 제1권 제1호, 한국평생교육학회, 1995, 204쪽.

한국 정부는 늦었지만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³⁸ 학교 수는 적었지만 총련계 학교에 비해 일본사회에 좀 더 가깝게 적응하면서 발전했다. 금강 중·고교는 1985년에, 교토국제학교(교토한국학교에서 개칭)도 2003년에 제1조 교 인정을 받았다. 1954년에 창립한 도쿄한국학교만 여전히 각종학교에 머물러 독자적인 민족교육을 계속하고 있다. 한편, 1948년 제1차 민족학교 폐쇄로 다른 모든 학교가 불인가되는 가운데, 일본문부성의 심사에서 살아남아 1951년 3월 13일에 ‘제1조교’로 인가받은 중립계 백두학원 건국학교 소·중·고교는 1976년 한국 정부에서 재외국민교육진흥자금을 받아 재정난을 해결하면서 민단계 민족학교로 노선을 전환했다.

한국 정부는 한국인 자녀의 일본 공립학교 입학권을 확보했고, 1966년부터는 본국 하계학교제도를 만들어 재일한인 학생들을 한국에 초청하여 한국의 현실과 전통문화를 배우도록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또한 정부 예산으로 재일 한국학교 학생들의 조국방문 수학여행도 마련했다. 1980년에는 교육개혁심의회를 통해 ‘해외교포교육 발전방안’을 의결했고, 국제교육진흥원을 설립했다.³⁹ 일본 정부는 1991년 한일 외상회의에서 재일한인 교육에 관한 포용성을 확대하고 교원 채용에 국적조항을 철폐했다.⁴⁰

이러한 호의적 조건에서도 민단계 민족학교 수는 1993년 소 3, 중 4, 고 4개에 불과했다. 이 학교 재적학생은 전체 재일한인 아동의 0.8%에 불과했

38 한국 정부는 1961년 제3공화국 이후 교육보조금의 재정 지원을 약속했다. 도쿄에 장학관실을 설치해 장학관과 교사를 파견했고, 재일 한국학교에 파견교사를 배치, 민족교과를 담당하게 했다. 1962년 문교부는 재일한인 자녀들에게 모국수학제도를 마련했고, 일본학교에 재학 중인 2, 3세들과 성인들에 대한 민족교육과, 국가 홍보 및 문화교류활동을 목적으로 일본 대도시에 교육문화센터를 개설했다. 또한, 재일 한국학교의 육성과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과 학술단체의 연구 활동을 위해 재일동포 교육후원회(현 한국교육재단의 전신)를 발족시켰다. 조선학교에 비해 열세에 있던 한국학교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1965년부터 한국 정부는 정책적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여 대사관·영사관에 장학관을 파견하고 본국에서 교사를 파견했다. 민단 중앙에서도 교육위원회를 두기로 결정하고 재일조선인교육현장을 제정하기도 했다(오자와 유사쿠, 『재일조선인 교육의 역사』, 384쪽).

39 유병용, 「한민족의 해외이주와 민족교육 문제」, 『근현대사강좌』 제1호, 한국현대사연구회, 2002, 59~62쪽.

40 이밖에도 일본 정부에서 학교법인으로도 인가를 받은 민족학원이 10여 개 만들어졌다. 민족학원은 하루 2시간씩 주 2일 3개월 정도의 단기 프로그램으로 한국의 언어, 문화, 풍속, 사회, 음악 등을 가르친다(김대성, 「재일한국인의 민족교육에 관한 연구」, 209~213쪽).

는데, 그중 반 이상이 한국에서 온 상사 직원의 자녀거나 파견 공무원 또는 유학생의 자녀였다.⁴¹

5) 일본 정부/사회의 민족학교에 대한 탄압과 지원

일본 정부는 해방 직후부터 재일동포 민족학교를 억압해왔으나 재일동포운동과 일본사회운동의 영향으로 차츰 민족학교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1965년 12월에는 문부성에서 민족학교를 각종학교로도 인가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무차관통달 「조선인만을 수용하는 교육시설의 취급에 대하여」를 발표했으며, 1966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던 학교설립인가권·시정·폐쇄명령권을 문부대신에게 집중한다는 내용의 외국인학교법안을 발표했다. 이 법안은 재일동포와 일본사회의 반대에 부딪혔고, 일본 정부는 수차례 시도 끝에 이 법안을 포기했다.⁴²

탄압의 한편에 지원도 적지 않았다. 1950년대부터 교사와 학생, 학부모회뿐 아니라, 일본교직원조합(이하 일교조),⁴³ 일본공산당도 협력하여 민족학교 폐교반대운동을 전개했다. 마침내 1955년 3월 ‘도쿄도립조선학교’(현재의 도쿄조선중고급학교의 전신)와 ‘오사카시립니시이마자토중학교’(大阪市立西今里中学校) 등 그때까지 공비로 운영되던 조선학교가 일본 정부에 각종학교로서 인가받게 되었다. 후에 이러한 발전이 진전되어 1965년 11개, 66년 32개, 67년 28개, 68년 8개교 등 1975년까지 모든 조선학교가 각종학교로 인가를 받게 되었다.⁴⁴ 비록 대학 입학 자격이 없기 때문에 대학 입학을 위해서는 검정고시를 봐야만 하는 각종학교지만, 이 결정 후 민족교육은 계속 발전했다.

41 김대성, 「재일한국인의 민족교육에 관한 연구」, 196~197쪽.

42 이후 몇 차례 더 시도했던 것도 모두 폐안되었다. 그리고 문부성은 마침내 외국인학교제도의 창설을 포기하고 말았다.

43 일본교직원조합(日本教職員組合, Japan Teachers Union, JIU)은 일본 최대 교원 및 기타 학교 직원에 의한 노동조합 연합체로서, 학교에서 국기 게양·국가 제창의 문제 제기와 역사교과서와 관련된 재판 등 민족학교와 관련된 쟁점에 대해서도 연대를 계속해왔다.

44 朝鮮大学校民族教育研究所 編, 『在日朝鮮人の民族教育の権利について: 朝・日関係改善と国際化の流れの中で(資料集)』, 学友書房, 1991, 322쪽.

조선대학교 인가 과정에서⁴⁵ 도쿄도가 문부성의 방침에 반하여 결정을 내린 것을 기점으로, 이후 학교 인가 문제를 둘러싸고 지방자치체가 차관통달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늘어났다. 또한 1970년대 후반부터는 각종학교에 대해서도 국가나 지방자치체가 교육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립학교 진흥조성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체가 조선학교에 교육보조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한편 1969년 나가사키 조선(造船)대학을 필두로 민족학교 졸업생의 시험 자격을 인정하는 대학이 늘어나서 마침내 2004년 국립대학인 도쿄대학도 민족학교 졸업생을 받게 되었다. 조선대학생에게 일본대학원 문호를 개방하는 흐름 또한 확대되고 있다. 교원 채용에서 국적조항을 무시하고 재일동포를 교원으로 채용하는 도부현이 늘어나서 문부성은 1991년 이 국적조항을 철폐했다.⁴⁶

이밖에 1965년 일조협회, 일교조 등이 중심이 되어 만들어진 일조민족교육문제협의회(日朝民族教育問題協議會, 일조교연), 당시 대표적 일본 지식인과 일교조, 일본모친대회, 일조협회 등이 구성한 ‘전국연락회’ 등이 활동했다. 1971년 9월에 발족된 “전국재일조선인교육연구협의회 오사카, 일본학교에 재적하는 조선인 아동·생도의 교육을 생각하는 모임”(全国在日朝鮮人教育研究協議會大阪, 日本の学校に在籍する朝鮮人児童・生徒の教育を考える会)은 1998년 한신교육투쟁 50주년기념집회에서 ‘민족교육권리선언’을 발표하고, 같은 해에 ‘민족교육 네트워크’를 발족해 2000년부터는 일본식 이름 대신 조선 이름을 당당히 쓰자는 ‘본명캠페인’(혹은 본명실천)을 전개했다.

4. 민족교육의 실용화, 다양화 및 통일 지향(1990년대 이후)

이미 1970년대부터 민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이 감소되고 있으나, 재일동

45 1967~1968년 조선대학교 인가운동에 각계각층의 인사들과 국·공·사립대학 교수들까지 동참한 결과, 1968년 4월에 각종학교 인가를 획득하게 되었다(<http://kangaerukai.net/jikoshoukai.htm>).

46 오자와 유사쿠, 『재일조선인 교육의 역사』, 481~517쪽.

포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이 한국학교, 조선학교 모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1990년대 한국에서 민간정부가 출범한 후 잠시 이루어졌던 한국학교/조선학교의 교류가 2010년대 들어 다시 생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측면에서 유연성을 갖게 하는 근본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즉 현상적인 냉각의 수면하에서 ‘구조적 융합’이 진전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1) 한국학교의 새로운 시도

한국의 민주화와 경제발전, 그리고 한일교류로 인하여 한국학교에 대한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었으며, 한국 정부는 민족교육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지원을 늘리고 있다. 한국 정부로부터 교육법 82조의 초·중·고등학교 인가를 받은 한국학교는 현재 네 곳이다. 일본 학교교육법 제1조교로서 오사카의 건국유소중고등학교(建国幼小中高等学校, 1946년 3월), 금강유소중고등학교(金剛幼小中高等学校, 1946년 4월 5일), 교토국제중고등학교(京都国際中高等学校, 1947년 5월 13일)가 있으며, 제83조에 의해 각종학교로 분류되고 있는 도쿄한국학교(東京韓国学校, 1954년 4월 26일 설립)가 있다. 이밖에 성인 중심의 나고야한국학교(名古屋韓国学校), 민단사무소에서 행하는 각종 강좌와 강좌제 민족대학 등이 있다.

한국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육부)에서는 재외동포교육의 기본계획을 수립해 현지 교육기관의 설치와 운영을 지원하고, 교사를 선발·파견하는 등 이들의 인사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교육부 산하에 있는 한국교육원이 한국학교와 한글학교를 지원하며, 국제교육진흥원은 재외동포교육용 교재와 자료를 개발·보급하고, 재외 한국 및 한글학교 교원을 초청하여 연수를 실시하고, 인터넷을 이용해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교육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⁴⁷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조선학교와는 반대로 한국학교의 학생 수는

47 유병용, 「한민족의 해외이주와 민족교육 문제」, 45~46쪽.

〈표 1〉 재일 한국학교 현황(2001/2009/2016년)

구분 학교명	학생수(명)		
	초	중	고
건국학교	159/167/146	116/122/99	124/120/161
금강학교	166/174/107	52/106/52	51/67/74
교토국제학교	—	54/51/37	65/104/126
도쿄한국학교	377/589/716	209/251/336	222/254/295

주: 금강학교는 2016년이 아닌 2015년.

출처: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2001, 891쪽;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2009, 869쪽; 오사카한국교육원 자료(2015, 2016); 각 학교 팸플릿.

소폭이지만 점차 증가하고 있다.⁴⁸ 학교 수와 교원 수는 늘어나지 않음에도 학생 수가 증가하는 것은 한국학교의 수요가 크다는 것을 말해준다. 특히 한국에서 온 주재원 자녀들이 많은 도쿄한국학교⁴⁹는 일본어 시간을 제외한 모든 수업을 한국어로 진행하고 있다. 이 학교의 교장은 2016년 11월 “통일 직전의 재외학교로서 남북대립의 보이지 않는 국경이 있는 현재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다.⁵⁰ 최근 학생 수의 폭발로 제2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⁵¹

개교 3년이 된 청구학원 쓰쿠바는 일본에서 대학입시 대비를 최고로 잘하는 중·고등학교로 만들겠다는 한 재일동포 사업가의 집념으로 세워졌다. 학생 정원 600명을 받아 기숙사를 포함하여 매우 큰 교사를 마련했다.⁵² 이 학교의 이사장은 이 학교를 일본뿐 아니라 전 세계 동포들의 본거지로 만들 것이며, 이 학교는 통일이 되면 더욱 중요한 민족학교가 될 것이라는 자신

48 1999년 학생 수는 1,597명이다. 재일한인 자녀 총수의 약 0.9%로 극히 적은 숫자지만(이정훈·윤인진, 「재일동포의 민족교육과 모국수학의 현황과 발전 방안」, 재외한인학회 월례발표회 발표논문, 1998, 287쪽), 감소하는 추세는 아니다.

49 2016년 4월 현재 초·중·고등부 전체 학생의 64.9%가 일시 거주자이며 특별영주자는 7.1%에 불과하다(도쿄한국학교 학교 현황, 2016).

50 필자와 인터뷰: 2016, 11.

51 학교법인 도쿄한국학원, 「도쿄한국학교 연구프로젝트위원회 검토보고서」(2015. 6. 26) 참조.

52 <http://www.cheonggu.kr>

감을 내보였다.⁵³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학교는 대체로 일본학교 교과서를 가지고 한국인 교원이 일본어로 교수하고 있으며, 한국어와 한국사 등 민족교과는 학년에 따라 주당 몇 시간씩 지도하는 과외활동(‘특설교과’ 형식)으로만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일본학교와 경쟁하기도 힘들고, 한국어 능력도 완벽하게 기를 수 없는 어정쩡한 수준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재일한국인들은 자녀를 아예 일본국민의 의무교육과정을 교육받는 일본학교에 보내거나, 아니면 한국어를 완벽하게 배울 수 있는 총련계 조선학교에 보내는 경향이 있다.⁵⁴ 한국학교 자체에도 재일한국인보다 일시 체류자 자녀가 늘어나고 있다는 관찰이 있다.⁵⁵ 일본의 제1조교라는 지위의 여러 유리한 점에도 불구하고, 독도 문제, 일본군위안부 문제 등 한일관계의 갈등 지점에서 애매한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동포들도 적지 않다.

이밖에 한국에 민주화가 진행됨에 따라 한국으로의 모국 수학이 늘어나고 있다. 모국 수학도 민족교육의 중요한 한 부분이 되고 있는 것이다.⁵⁶

2) 민족학급의 새로운 변신

앞서 언급한 대로 1972년 새롭게 활기를 띠기 시작한 민족학급은 일본 전국의 소학교, 중학교에 확산되어 오사카(市, 府)의 경우, 2015년 소학교 115교, 중학교 70교에서 민족교육이 공식(민족학급) 또는 과외활동(민족클럽)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규슈 지역은 아직도 1950년에 설립된 민족학급이 3개의 소학교에 49개의 학급으로 남아 있다.⁵⁷ 1990년대에 들어 한국 정부가 민족

53 이사장 면담: 2016. 11.

54 유병용, 「한민족의 해외이주와 민족교육 문제」, 79쪽.

55 홍석화, 「(재일동포의 모국어 교육)모국어 교육의 현장: 민족학교-금강학원(金剛學院)을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10, 이중언어학회, 1993, 235~236쪽.

56 모국수학에 관해서는 윤다인의 「모국수학이 재일동포의 민족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2014를 참조할 것.

57 足立小学校, 戸畑中央小学校, 若松中央小学校.

학급(민족클럽, 국제학급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이 민족 학급들은 한국어, 한국역사에 국한하지 않고 인권교육, 다문화 및 국제이해 교육으로 범위를 넓히고 있다.

이밖에 2002년부터 실행된 유토리 교육의 맥락에서 이루어진 ‘총합적 학습’(総合的学習)의 하나로 한국학급, 국제이해 교육을 위한 학급이 일본의 여러 지역에서 시행되고 여기에 과거의 민족학급과 유사한 수업이 부정기 적으로 진행되기도 한다.⁵⁸

3) 새로운 중립계 학교의 시도

이와 같이 한국학교는 해방 후부터 고착되어온 양적 열세와 운영의 틀의 한 계를 벗어나기 힘들며, 다른 한편 조선학교는 총련이라는 운영주체가 갖는 한계를 벗어나기 힘든 실정에서⁵⁹ 재일동포를 세계시민으로 교육시킨다는 목표를 내건 새로운 개념의 한국학교가 시도되었다. 2008년 오사카에 설립 된 코리아국제학원(코리아國際學院, Korea International School)이 그것이다.⁶⁰ 이 학교는 3개 국어(한국어, 일본어, 영어)로 교육하고 해외연수와 다양한 경험을 강조하여 학생들을 세계와 동아시아를 넘나드는 ‘경계인’[越境人]으로 육성 하며,⁶¹ “남북한의 통일과 세계와 동아시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목표를 내세웠다.⁶² 이 학교는 기본적으로 총련·민단계를 포괄 한 재일동포를 위한 학교지만, 일본학생에게도 문을 열고 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을 조선학교에서 마친 후, 마침 이 국제학교가 설립된 것을 알

58 기타규슈 지역에 거주하는 재일동포 2세인 73세의 배동록 씨는 근처의 일본 소학교에서 지금까지 2 시간 정도의 한국역사 및 문화 수업을 1000회 넘게 진행하고 있다(2016년 9월 수업 참관).

59 정갑수, 2003년 면담.

60 재일동포로 처음 변호사가 된 김경득, 처음 도쿄대학 교수가 된 강상중, 1985년부터 총련계와 민단 계를 아우르는 ‘원코리아 페스티벌’(One Korea Festival)을 주도했던 활동가 정갑수, 조선대학 공학 부 출신 사업가 문홍선, 총련계 재일조선인인권협회에서 활동했던 변호사 홍경의, 임범부, 양영철 등 이 주축이 되고 수많은 재일동포들이 기부금을 냈다.

61 “재일 코리안을 비롯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자기의 아이덴티티에 대해 자유롭게 생각하고 배우는 국제학교 … 확실한 학력과 풍부한 개성을 가진 창조력 넘치는 인재로 국가와 경계를 넘나들며 활약하는 인간형, 즉 「세계인」 육성을 목표”로 한다는 이 학교의 교육이념이 이를 명확히 보여준다.

62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코리아국제중고등학교 웹사이트(<http://www.kis-korea.org>) 참조.

고 이 학교 고등부에 1기생으로 진학한 조○○양⁶³에 따르면, 당시 자신과 함께 고등학교에 15명이 진학했는데, 학생들의 국적은 조선, 한국, 일본 국적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한국에서 온 학생도 있었다. 이후 후배들도 마찬가지로였다고 한다. 선생님들의 국적도 재일동포, 한국인, 일본인, 영국인 등 다양하다. 이 1기생 중 12명이 졸업했는데,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와세다대학, 런던예술대학 등 한국과 일본, 세계의 우수한 대학에 진학했다.⁶⁴ 조 양은 이렇게 높은 대학 진학을 때문에 학비와 기숙사비를 포함한 교육비가 다소 비싼데도 불구하고 입학생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학교도 최근 여러 문제에 봉착해 있다. 민단과 총련 양쪽에서 모두 비난을 받았으며, 이사진의 내부 화합도 어렵다고 한다. 재정 문제로 2012년 한국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여 중립이라는 입지를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수업시간에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내용도 있지만 규제할 방도가 없다는 보고도 있다.⁶⁵

4) 조선학교의 변화

(1) 학생 수의 감소와 재정적 어려움

조선학교가 직면한 많은 어려움 중 하나는 민족학교 학생 수의 감소 추세다. 그것은 전반적인 출산율 감소, 일본 국적 취득,⁶⁶ 한국적으로서의 이동 추세가 꾸준히 진행된 결과다. 점차 개선되어왔지만 민족학교 졸업생들의 학력불인정이 수십 년째 지속되는 상황에서 일본학교로의 진학이 계속 증대해왔던 것도 민족학교의 학생 수 감소의 또 다른 요인이다. 학생 수가 격감

63 졸업 후 서울대학교 사회 계열에 입학하여 필자의 강의를 수강했다. 필자는 조 양과의 면담을 통해 이 학교에 대하여 밀도 있는 지식을 갖게 될 수 있었다.

64 <http://www.kis-korea.org/kr/shinro/index.html>

65 이범준, 『일본제국 vs. 자이니치』, 북,롬마, 2015, 283~286쪽.

66 일본 법무성 민사국의 각 연도 통계에 따르면 2003년 1만 1,778명을 정점으로 귀화자 수가 점차 진정되고 있다. 2009년 7,637명, 2011년 5,656명. 또한 일본의 국적법 개정(1985년)으로 출생과 동시에 일본 국적을 부여받는 새로운 세대인 재일동포 집단이 증가하고 있다.

하면서 조선학교들의 통폐합이 일어나서 학생들의 통학거리가 멀어졌다. 필자가 2003년 방문한 오사카의 한 조선초급학교는 1945년에 설립되어 1968년에 각종학교로 인정받아 운영되어오다가 1991년 주변의 네 개의 학교가 통폐합된 것이라고 했다.⁶⁷ 두세 시간 거리를 학교버스로 통학하면서 통학시간을 학습의 연장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으며, 초등학교부터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경우도 있다. 교사나 학부모 모두 민족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것에 큰 희생이 따르는데, 이것은 하나의 민족운동으로 인식되기도 한다.⁶⁸ 조선학교의 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현재 남아 있는 학교에도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다.⁶⁹ 2016년 현재 고등학교⁷⁰는 일본 전체에 10개교가 남아 있다.

한편 민족학교는 북한의 지원금이 거의 끊기면서 지자체 보조금, 학부모 형이 내는 교육비, 그리고 교육회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학교의 관리 운영 및 재정과 관련해서는 ‘조선인교육회’라는 조선학교만의 독특한 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는 한국의 육성회나 일본학교의 학부모회(PTA)와도 다른데, 학교의 총무부에 해당하는 조직으로 학교재정 전반을 담당한다. 대개 하나의 도도부현 내에 몇 개의 학교가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학교의 교육회를 관할하는 도도부현 교육회가 조직되며, 이 도도부현 교육회의 상부조직으로서 ‘재일본조선인중앙교육회’(1955년 결성)가 존재한다. 각급 학교 교육회는 학교 운영의 자립적 토대를 굳게 하기 위해⁷¹ 학부모들이 매월 내는 수업료 외에 나머지 5할 이상의 학교 재정을 마련해 학교 운영 전반을 책임

67 이쿠노초급, 히가시오오사카중급, 오사카고급학교가 같은 곳에 있다. 이 이쿠노조선초급학교(生野朝鮮初級學校)는 1991년에 동오사카조선제1초급학교(東大阪朝鮮第一初級學校), 동오사카조선제3초급학교(東大阪朝鮮第三初級學校), 동오사카조선제5초급학교(東大阪朝鮮第五初級學校)를 병합해서 개설했다.

68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문웅, 「총련계 재일조선인의 생활세계: 인류학적 접근」, 『한국사회과학』 제26권 제1·2호,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184~187쪽을 참조할 것.

69 2016년 9월 현재 야마구치현의 시모노세키 조선학교는 이미 이전에 주변의 4개 학교가 통폐합되어 남은 학교인데 고등학교는 없어지고, 유치원, 초·중급학교 전체 학생 수가 38명이다.

70 조선학교에서는 고급학교로 부른다.

71 “자력갱생의 정신을 발휘하여 학교 관리 운영에 필요한 제 조건을 해당 학교단위마다에서 해결한다는 것이다”라고 교육회 운영방식의 의의를 밝히고 있다(김덕룡·박삼석, 『재일동포들의 민족교육』, 조선대학교 민족교육연구소, 1987, 78쪽).

지게 되는데, 이것은 대부분은 해당 조선학교 졸업생들과 상공인들을 중심으로 회원을 구성한다. 교육회 말고도 아버지회·어머니회가 학교 관계자들과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열면서 학교 운영 전반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기도 한다. 또한 30대를 중심으로 한 동포들의 상업 네트워크 조직인 재일본조선청년상공회(在日本朝鮮靑年商工会, Korean Youth Commerce Community, 이하 청상회)로부터 학교시설의 보수와 운영 등에 관한 전반적인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한다. 청상회는 1995년 9월 결성된 총련의 가맹조직으로, 젊은 재일한인의 상업 네트워크다.⁷² 2010년 시작된 고교무상화에서 조선학교만 제외되었고, 1970년대 후반부터 나오기 시작한 지자체 보조금도 최근 끊기고 있다.

(2) 일본 정부와 사회의 억압

북일관계가 악화됨에 따라 일본 정부가 조선학교에 대해 재정적 압박을 가하는 것이 조선학교 위기의 또 다른 중요한 이유다. 최근 ‘에다가와학교 재판’으로 한국사회에도 알려진 도쿄도(東京都) 고토구(江東区) 에다가와 1정목에 위치한 도쿄제2초급학교(東京第2初級学校)의 사례는 이러한 상황을 잘 보여준다. 도쿄도는 2003년 12월 재일동포 자녀 60여 명이 다니고 있는 연건평 200평 규모의 낡고 조그만 60여 년의 역사를 지닌 제2학교가 도유지(都用地) 약 4,000㎡를 불법점유하고 있다며, 건물 일부 반환과 토지사용료 4억 엔을 지불할 것을 골자로 도쿄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⁷³ 그로부터 3년 3개월 동안 18회 구두변론이라는 기나긴 토지재판에 휘말렸다가, 2007년 3월 8일 화해하게 되었다.⁷⁴ 이와 유사한 분쟁에 휘말리면서 재정에 어려움을 겪는 조선학교들이 늘어나고 있다.

2010년 일본에서 고교무상화법안이 각의에서 결정되었으나, 조선학교

72 <http://www.kyc.gr.jp/>

73 제2학교는 1971년 당시 미노베 도쿄도지사에게 재일한인이 에다가와에 거주하게 된 역사적 경위를 설명했다. 특히, 학교 재정의 어려움 중에서도 재일한인 민족교육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없음을 들어, 학교 토지의 사용료만이라도 무기한 무상임대를 요청했고 도쿄도는 1972년 4월 이를 수락한 바 있다.

74 에다가와조선학교지원 홈페이지 재판 보고(<http://kinohana.la.coocan.jp/edagawatop.htm>) 참조.

만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도쿄도, 오사카부 등에서 지자체 차원의 지원금도 끊었다. 이 10개의 조선고급학교가 최근 일본 정부에 대하여 고교 무상화 제외가 헌법 위반이라는 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며, 오사카고급학교는 지자체의 보조금 지급 중단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3) 개혁의 시도와 변화

조선학교의 교육체계는 일본의 교육체계와 같이 ‘6·3·3·4제’의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취학 전 3년의 보육이 있다. ‘조선학교’의 각급 학교의 학기 구분, 연간 등교일수(240일), 연간 수업주수와 수업일수(35주, 210일) 및 주당 수업시간은 일본학교와 기본적으로 같다. 중·고급부는 대개 한 학교에서 함께 운영되고 있는데, 중급학교는 모국어를 기본으로 한 민족교육 과목과 수학을 비롯한 자연 기초과학교육 그리고 외국어교육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고등교육으로는 도쿄에 위치한 ‘조선대학교’가 종합대학적인 체계와 내용을 갖추고 있다.⁷⁵ 과거에 대부분의 조선학교 학생들은 이 교육체계 속에서 중등교육까지 이수하고 난 뒤에, 재일동포 네트워크와 관련된 분야에 취업하거나, 조선대학교에 진학했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 재일동포 내부에서도 많은 변화가 생겨났고, 취업에서도 에스닉 커뮤니티를 넘어 일본사회로 진출하는 경우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일본의 대학·대학원에 입학할 시도하면서 학력인정이라는 쟁점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서 학력인정을 위한 투쟁과 함께, 조선학교 커리큘럼 자체에도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교과서 개편은 1955~1957년, 1963~1964년, 1974~1977년, 1983~1985년, 1993~1995년, 2003~2006년에 걸쳐 이루어졌는데,⁷⁶ 1990년대 이후 개편은 총련이 변화하는 사회에 맞는 민족교육의 발전을 위해 스스로 조선학교의 교육내용과 태도를 변화시

75 그밖에 일본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동포 자녀들과 일반 성인들을 망라하는 교육시설들의 전체인 비정규교육체제로 오후야간학교, 하기학교 등이 존재한다. 조선대학교 학부 등의 기구에 대해서는 朴三石, 『日本のなかの朝鮮学校: 21世紀にはばたく』, 210쪽을 참고할 것.

76 강성은, 「〈통일교과서〉를 목표로 한 조선학교의 조선사교과서개정에 대하여」, 일본교과서바로잡기 운동본부, 『글로벌화와 인권·교과서』, 역사비평사, 2003, 80~86쪽.

킨 것이다.⁷⁷ 1993년 개편에는 그동안 고집해왔던 북한식의 커리큘럼을 일본 문부성에서 요구하는 체계로 맞추어가기 시작했다.⁷⁸

남북한 관계의 개선은 이러한 변화를 더욱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2000년 6.15 공동선언은 총련의 교육방침에 큰 영향을 미쳤다.⁷⁹ 2003년 개편에서 ‘사회’ 교과서는 초·중·고급부의 전 과정에서 ‘한국’과 ‘통일문제’를 다루었는데, 6.15 남북공동선언에 큰 의미를 부여하여 통일을 둘러싼 새로운 정세를 염두에 두고, 한국에 관하여 통일의 파트너로서 자세히 서술했다. 현재 모든 조선학교는 북한의 교과서가 아니라 2003학년도부터 개편된 새로운 커리큘럼에 따라 자체 제작한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다.⁸⁰

조선대학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각급 조선학교에서는 2001년부터 일반 교실에서 김일성·김정일 부자 사진을 떼어냈다. 필자가 2003년 방문한 오사카 이쿠노구의 한 초·중급 조선학교의 교장선생님은 1945년에 이 학교가 설립된 후 계속 걸어두었던 김일성·김정일 사진을 교장실에만 걸어놓고 2년 전에 모든 교실에서 떼어냈다고 한다. 일본에서 이 학교에서 사상교육을 시킨다고 비판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조선학교가 김일성 체제를 주입시키는 기관이라고 하는 외부의 시선과 북한체제의 불안정이 낳는 여러 여파에서 거리감을 두기 위함이었다.

조선학교는 중급학교 이상의 여학생에게 치마저고리를 입게 해왔는데, 북일관계가 악화될 때마다 이 여학생들이 폭행의 대상이 되었다. 2003년 필자가 방문한 이쿠노구의 초중급학교에서도 여학생 중 52%가 봉변을 당

77 1999년 9월 총련중앙위원회 제18기 제3차회의 확대회의를 열고, “새 세기를 향하여 사업방법을 근본적으로 전환하여 총련을 모든 재일동포들에게 참답게 복무하는 동포대중단체로 더욱 발전시키는 것에 대하여”라는 활동방침과 민족교육에 대한 발전대책을 모색했다.

78 이문웅, 「총련계 재일조선인의 생활세계: 인류학적 접근」, S. Ryang, *North Koreans in Japan: Language, Ideology, and Identity* 참조.

79 예컨대,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중급부 3학년 『조선력사』는 1920~1945년 광복까지의 내용 중에서 독립운동 기술에서 항일빨치산투쟁 이외에 기술되지 않았던 국외의 독립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등과 문학, 예술, 학문, 과학기술 등에 문화에 대한 기술을 늘렸다.

80 김희정, 「재일조선학교 교육변화에 관한 연구: 도쿄조선제1초중급학교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화여대 지역연구협동과정 석사논문, 2008, 67~71쪽.

한 경험이 있다고 했다.⁸¹ 이러한 폭력 때문에 현재 조선학교에서는 입학식, 졸업식 등의 특별 행사 때 외에는 치마저고리를 입지 않으며, 학교버스에 학교 이름도 쓰지 않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교육내용과 경영에서 좀 더 근본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구가 내부에서 제기되었으나 좌절되었다. 1998년 재일동포 260명이 참가한 민족교육포럼에서 조선학교 개혁안(‘요청서’)을 총련 중앙에 제출했으나 묵살된 바 있으며,⁸²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에 걸쳐 총련과 조선학교의 개혁을 위한 노력이 좌절된 것에 대한 기록과 연구가 나와 있다.⁸³ 총련 내부의 이러한 노력이 한국에서 민주화가 진전되고 남북교류에 따른 조선학교와 한국의 교류도 개방되었던 시기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여러 함의를 읽을 수 있다.

(4) 조선학교 내 한국 국적 학생의 증가. 학교의 자율성 증대

위와 같은 여러 변화의 결과이기도 한 중요한 현상이 조선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다. 한국 국적 학생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이미 오래전 조선적으로부터 한국 국적으로의 이동이 시작한 시기부터 꾸준히 진전되어온 현상으로, 2010년대 들어 한일관계와 북일관계가 악화되면서 급속히 가속화되었다. 조선학교는 한국적 학생에 관한 통계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수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지만, 다음의 몇 사례에서 그 정도를 추측할 수 있다. 2003년 필자가 방문한 이쿠노 초급학교 교장선생님도 이 학교 초급부 262명의 학생 중 반 정도가 민단계 또는 뉴커머⁸⁴의 한국적이라고 말했다. 필자가 2003년에 만난 히로시마조선소중

81 왜 남학생이 아니라 여학생에게만 민족의복을 입히는가에 대한 젠더 관점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도 하다.

82 윤건차, 박진우 외 옮김, 『자이니치의 정신사』, 한겨레출판, 2016, 832~833쪽.

83 그 한 예를 강철수,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의 노선전환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석사논문, 2008에서 볼 수 있다.

84 1965년 한일 간 국교정상화 이후 일본에 입국하여 정착한 한국인을 일제시기에 간 사람들과 구별하여 뉴커머라고 부른다.

학교(広島朝鮮小中高級学校)의 여학생들은 자기 학교에 민단계 학생이 반 이상이라고 했다. 또한 2003년에 방문한 조선대학교 학생들은 조선대학교에도 한국적 학생이 상당수라고 말했다. 『아사히신문』(2010년 3월 7일)은 1946년에 창립된 도쿄도 북구에 있는 도쿄조선중고급학교(고교생 563명, 중학생 164명 재적)는 처음에는 조선적 학생뿐이었으나, 한국적 학생이 차츰 늘어나서, 현재 조선적 학생이 약간 많지만 한국적 학생의 비율도 거의 같다고 언급한 바 있다.⁸⁵ 손애경은 K조선초급학교 초급부 5학년 학생들의 국적조사 결과 조선적 8명, 한국적 6명(총 학급 학생 수 14명)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다.⁸⁶

2016년 필자가 간접적으로 들은 바에 따르면 K조선중고급학교 교장은 뉴커머를 포함하여 한국 국적 학생이 반수 정도 된다고 말했다. 역시 간접 조사에 의하여 S유초중급학교 교장도 한국 국적 학생이 반 정도 된다고 했다. 오사카와 교토 지역의 조선학교 교장들도 모두 반 정도가 한국적을 가진 학생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들은 조선학교에서 학생의 국적은 고등학교 3학년에 시행되는 평양으로의 수학여행 때에야 확실히 알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필자는 이렇게 정확한 언급을 피하고 느슨하게 말하는 반수 정도라는 것은 사실상 반 이상이라는 현실을 말한다고 해석했다. 일본 정부는 일본의 외국인거주자 중 한국적과 조선적을 한국·조선적으로 통합하여 통계를 내다가, 2015년 12월부터 분리 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한국적으로의 이동률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2015년 12월 현재 재일동포 전체 수는 한국 국적이 45만 7,772명, 조선적이 3만 3,939명이며, 그 중 특별영주자는 각각 31만 1,463명, 3만 3,281명이었으니,⁸⁷ 조선적 학령 아동 수가 얼마나 적은지 알 수 있다.

조선학교에는 한국 국적뿐 아니라 일본 국적 학생도 다수다. 현재 조선학교의 입학 방침은 철저히 ‘민족’이다. 2016년에 필자의 지인인 재일동포

85 “…言葉、文化といった民族教育を重視して韓国籍でも子どもを通わせる保護者も少なくない。”(朝日新聞, 2010. 3. 7).

86 손애경, 「총련계 재일조선인 커뮤니티와 조선학교」, 서울대 인류학과 석사논문, 2006, 17쪽.

87 http://www.moj.go.jp/housei/toukei/toukei_ichiran_touroku.html
<http://www.e-stat.go.jp/SG1/estat/List.do?lid=000001150236>

가 만난 한 조선학교 교장은 “부모, 친외 조부모, 심지어는 친외 증조부모에 ‘조선민족’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입학을 허용한다”고 말했다. 최근 재일동포와 일본인 간의 결혼에서 태어나 일본 국적자가 된⁸⁸ 소위 ‘더블’이 크게 늘어나서 조선학교 입학 학생 중 일본 국적자가 증가하게 된 것이다. 조선학교 학생 대부분이 한국식 이름을 사용하고 있지만, 간혹 일본식 이름을 사용하는 학생도 나타나고 있다.

한국적 학생 증가의 첫째 요인은 재일동포에게 있어 국적의 의미가 약화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그와 연관되지만 재일동포에게 있어 국적이 곧바로 남북한에 대한 실질적 소속과 직결되지 않는다는 역사적인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학교 자체가 한국적/조선적을 따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학생 자체도 한국학교/조선학교를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듯하다. 앞서 언급한 히로시마고급학교의 학생은 학교에서 한국적/조선적에 대해 불문에 부친다고 했다. 2007년에 동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을 쓴 김숙자가 면담한 한국적 학생들은 “한국학교도 좋고 조선학교도 좋다. 집에서 가까운 곳을 택하겠다”,⁸⁹ “조선학교의 친구들과 환경이 너무 좋았다”⁹⁰고 말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에 유학을 온 한 재일동포 학생은 고등학교까지 조선학교를 다녔는데, 조선적과 한국적 동포들이 같은 지역에 살면서 같은 학교에 다니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조선적으로부터 한국적으로 국적 변경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생기기 시작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많은 재일동포들이 일본에서 살기 힘든 조선적(실제로 무국적) 상태에서 한국적으로 바꾸었고, 한 가족 내에도 한국적과 조선적이 섞여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따라서 큰 거리낌 없이 모국어로 교육받기 위해 가까이 있는 조선학교에 자녀를 입학시키는 한국적 부모가 많이 존재하며, 민단 학교의 수가 워낙 적어서 그러한 흐름은 점점 더 공공연해지고 있다. 조선학교도 이러한 상황에

88 1985년 일본 국적법: 호적법이 변경되어 부계 중심이 양계 중심으로 되었다. 즉 부모 중 한 사람만 일본인이어도 자녀는 일본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89 김숙자, 「재일조선인의 정체성과 국적」,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석사논문, 2007, 49쪽.

90 김숙자, 「재일조선인의 정체성과 국적」, 58쪽.

대해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고 한다. 재일동포 커뮤니티가 국적에 상관 없이 존재·유지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아버지회-구술4] 두 아이를 모두 조선학교에 보내고 있어요. 일본사회에 계속 살게 될 건데, [조선학교가] ‘각종학교’라서 의미도 없고…(한숨) 원래는 아이를 민단계 신주쿠에 있는 도쿄한국학교에 보냈어요(침묵). 그런데 아무래도 그쪽은 뉴커머 자녀들이…한국 대학 입시용 교육이니까…전학을 결정하기 전에 교장 선생님과의 면담도 해봤고 했는데…교장선생님도 고민이 많으시더군요. 그래서 결국은 조선학교에 보내게 되었어요. …경제적 부담은 좀 있지만 [뉴커머는] 저희[올드커머]와는 다르죠. 아이들 교육에 대한 생각이 말입니다.

여기에 앞서 논의한 대로 조선학교의 교육이 북한중심의 사상교육에서 벗어나기 시작했고 2004년 도쿄대학을 포함하여 일본의 모든 대학이 민족학교 졸업생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하게 된 것도 조선학교에의 입학은 쉽게 만든 또 다른 요인이 되었다. 김숙자가 면담한⁹¹ 한국 국적 부모로서 자녀를 조선학교에 보내고 있는 한 사람은 “나는 재일조선인이고 아이들에게도 조선이나 재일조선인에 대하여 가르치고 싶다. … 현재 조선학교의 교육내용에 대해서 만족한다. … 교육내용이 많이 달라졌고 아이들도 학교생활을 즐기고, 현시점에서 불만은 없다”고 말했다. 2016년 9월 필자가 면담한 한국적 재일3세의 증언에 따르면, 민단에서 일하는 삼촌이 우리말을 못하면 민족성이 없어질 것이라며 딸(재일 4세)을 조선학교에 보내고 있다고 한다.

91 김숙자, 「재일조선인의 정체성과 국적」, 43쪽.

5) 한국/조선학교의 공통적 지향

(1) 실용화/다양화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조선적으로부터 한국적의 이동이 생활의 편리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이념 자체는 그대로라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바로 그 점이야말로 재일동포들에게 있어 국적은 심각한 경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재일동포들은 일본학교, 한국학교, 조선학교의 한 가지 길을 견지하는 데서 벗어나 가능한 여러 교육을 선택하여 조합하는 경향도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2007년에 만난 한 재일3세 동포는 민족정체성을 가진 재일동포로 자신의 아이를 키우고 싶다면, 자신의 아이들을 한국 초등학교에 보냈다가 주재원 자녀 중심의 한국 대학 입시 교육에 반발하여 조선초급학교로 전학시킨다. 거기서 우리말과 재일동포의 역사 및 동포 네트워크를 익힌 후, 일본중고등학교로 옮겨 일본사회에 적응한 후, 한국이나 다른 나라로 유학을 가는 경로를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한 동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⁹²

기본적으로 국민교육이라는 틀 안에서는 이제 재일이라는 게 묶을 수가 없는 것이고 ... 조선학교도 어떤 의미에서는 북의 이념을 사수하고 있고 한국계 학교도 재외국민이라는 입장에서 교육을 한국에 맞춰 하려는 이념이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 그러나 재일이라는 게 국적도 이제 다양화하고 있고 국제결혼도 80% 정도 차지하고 있고 ... 그러니까 이제 1민족 1국가라는 개념으로 재일을 묶을 수가 없잖아요. 그 자체를 어딘가에서 묶으려고 하려면 건국도 금강도 조선학교도 쇠퇴할 수밖에 없어요. 재일의 니즈는 이제 거기에는 없으니까요.

어찌 되었든 민족학교는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재일동포의 미래에 중요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결론에 다다른다. 실제로 2008년에 중립을

92 인터뷰 조사, 2015. 3.

표방한 코리아국제학원, 2014년에 한국계 청구학원이 건립되었고 도쿄한국학교는 제2캠퍼스 건립을 계획하고 있다. 조선적 동포가 이제 3만 명이 조금 넘는 정도로 규모가 축소된 상태에서 아직도 60개가 넘는 조선학교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해방 후 70년이 지나고 일본에서 나서 자란 3, 4세가 주축인 재일동포 사회에서 기적과 같은 일이다.

(2) 통일 지향

주목할 만한 점은 한국학교(새롭게 설립된 코리아국제학교와 청구학원까지)와 조선학교, 민족학급까지 일본의 민족교육이 모두 통일을 대비한다든지, 통일교육을 표방한다든지, 통일된 조국을 지향한다든지, 정도와 표현의 차이가 있지만, 통일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분단된 조국을 보지 못한 일본에서 태어난 3, 4, 5세의 학생들이 대부분이며, 분단이 일본사회의 차별에 더해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남북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재일동포들에게 있어 통일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통일은 지향일 뿐 현실에서의 실천은 간단치 않다. 백두학원과 코리아국제학교의 경우에서 드러난 대로 남북한, 민단/총련의 대립에서 벗어나 중립적인 입장을 표방한 민족교육의 시도가 성공적이지 않았다는 점이 이를 보여준다. 재일동포들의 남북한계를 아우르는 시민단체들의 시도 역시 중립적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힘들었다는 현실과 일치한다.⁹³ 남북한 관계가 유연할 때 중립성이 높아지기도 했지만, 분단의 벽을 재일동포사회에서 선도적으로 허물기는 힘든 것이 현실이다.

(3) 국적을 넘은 재일동포의 통합

1970년대부터 일본정주지향이 진전되면서 재일동포 권익운동을 비롯한 시민활동에서 남북한계의 통합이 일어났다. 민투련(1974), 이쿠노 문화축제

⁹³ 남북한계 시민을 아우르며 시작되었던 시민단체 민투련과 One Korea Festival도 민족통합의 측면에서 보면 그다지 성공적이었다고 말하기 힘들다.

(1983), 원코리아페스티벌(1985) 등이 동포 전체를 아우르며 이루어졌고, 민단도 조선적 동포의 모국방문을 시행했다(1975). 1990년대 들어 남북한 정부관계의 개선으로 동포사회뿐 아니라 민단-총련의 화합도 진척되었다. 2000년대까지 지속되었던 이러한 통합 기류는 2010년대 다시 냉각되고 한국인들의 조선학교 방문도 불가하게 되었다.

그러나 오랫동안 저변에 흘러온 통합의 기류는 조선학교의 한국적 학생 비율 증대라는 막을 수 없는 흐름을 만들고 있다. 2000년대 이후 조선적에서 한국적으로의 이동이 빠른 속도로 진행된 상황이므로 사실상 국적 경계의 약화에 더해, 한국적에 대한 어쩔 수 없는 관용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아직도 일본 국적 학생 수는 적으며, 한국학교에 조선적 학생이 문제 없이 입학한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또한 이전 시기에 비해 총련이나 북한의 통제가 현저히 약화되어 조선학교의 자율성이 커졌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아직도 조선학교가 강고한 북한 편향이라는 예민한 시선도 있으나,⁹⁴ 실제로 일본의 많은 조선학교 교장들은 나름대로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학생들이 한국의 대중문화를 자유롭게 흡수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하며 한국에서 온 사람들에게 학교를 개방하고 있다. 학생들은 일본이라는 환경에서 생활하며 대부분 한국이 고향이고 북한의 영향권에 있는 조선학교에서 생활하면서, 이념에 상관없이 스스로 판단하고 대처하는 자율성을 획득해간다는 현장 관찰보고도 있다. 교토의 한 조선 고급학교 3학년생이 그린 그림의 제목이 ‘핵 없는 세상’이라는 것⁹⁵은 이러한 자율성을 말하는 것이다.

94 2016년 5월 조선대학교 60주년 기념식에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에게 충성 맹세의 편지를 보냈다는 사실에 일본사회가 술렁였다(2016년 9월 20일 산케이신문이 밝혔다).

95 2016년 9월 일본 교수를 통한 간접 인터뷰.

5. 결론

재일동포사회는 우리 현대사가 응축된 곳이다. 남북한 본국의 정치현실이 그대로 투영되는 곳이기도 하다. 재일동포들이 본국에 열거할 수 없는 많은 기여를 했고 본국의 정치현실에 희생이 되기도 했지만, 새로운 조건을 선도하기는 힘들다는 것을 보아왔다. 재일동포의 점점 더 많은 비율이 일본학교에 입학하는 추세지만, 여전히 한국학교, 조선학교 및 민족학급을 중심으로 한 민족학교에 대한 수요는 상당한 정도로 유지되고 있다. 한편 남북한이라는 국적은 일본에서 태어나고 살아갈 재일동포들에게 조국이라는 곳 외에 어떠한 중대한 경계를 의미하지는 않는 듯하다. 그러나 조선학교에서 남북한 국적이 공존하는 것은 의도적인 시도의 결과라기보다 사회 변화에 따른 ‘구조적 융합’이라는 점에서, 남북한의 통합을 선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강하게 내포하는 것이다.

앞서 우리는 일제강점기와 해방 후에 민족공동의 교육투쟁→민족학교 분열→조선학교 압도→조선학교에 한국적 학생 증가의 역사적 과정을 고찰했다. 민족공동의 교육이 분열의 과정을 거쳐, 다시 민족 전체의 교육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염원하며, 그 염원이 현실이 되기 위해 기울여야 할 수많은 노력들에 대해 우리 모두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 글을 맺는다.